

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③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④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정치 - 선거 난이도 중

정답 ④

정답해설

- ① 우리나라는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이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약 2년 뒤 2007년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2년 2월 29일 선상투표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마침내 같은 해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 ③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다.

2. (가) ~ (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다)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권리의 보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①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 ②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 ③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 ④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법과 정치 - 사회계약설 난이도 중

정답 ②

정답해설

- (가)는 흉스, (나)는 루소, (다)는 로크를 설명하고 있다.  
 ② 루소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오답해설

- ① 흉스는 군주주권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 ③ 로크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 ④ 국민주권론은 루소와 로크의 주장이다.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 ②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③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법과 정치 - 국제사회의 행위주체 난이도 중

정답 ①

정답해설

- ① 유럽연합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오답해설

- ② 국제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초국가적 행위체인 시민단체이다.
- ③ 다국적기업은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 ④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도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법과 정치 -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난이도 중

정답 ④

정답해설

④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오답해설

- 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②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특별사면이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 ②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과 정치 - 헌법의 기본원리 난이도 중

정답 ②

정답해설

②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는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명시되어 있다.
- ③ 우리나라 헌법 제2조 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④ 제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남)과 을(여)이 혼인을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아 살던 중, 갑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을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을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거부하였다. 갑과 을은 재판을 거쳐 이혼하였다.

- ①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법과 정치 - 혼인과 이혼 난이도 중

정답 ②

정답해설

②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발생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판결)

오답해설

- ① 이혼숙려기간은 합의이혼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 ③ 을은 유책배우자인 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혼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7. (가)에 포함되는 법률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는(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으로, 국민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보기>

- ㄱ. 형사소송법
- ㄴ. 근로기준법
- ㄷ.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ㄹ. 민법
- ㅁ. 국가배상법
- ㅂ. 소비자기본법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ㅂ
- ④ ㄴ, ㅁ, ㅂ

법과 정치 - 사회법 난이도 하

정답 ③

정답해설

(가)는 사회법으로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환경법 등이 있다.

오답해설

형사소송법과 국가배상법은 공법에 해당되고, 민법은 사법에 해당된다.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2019고합○○○ 신청인 홍길동 신청 취지 “○○법 제△△조 제△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 생략 –  2.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 생략 –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인 홍길동(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
--

-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과 정치 - 헌법재판소 난이도 중

정답 ②

정답해설

제시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로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요구하는 신청서이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
- ③ 이 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의 효력 상실은 나타날 수 없다.
- ④ 헌법 소원은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갑은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만 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를 입었다. 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갑이 을로부터 신속,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② 형사보상제도
- ③ 국가배상제도
- ④ 배상명령제도

법과 정치 - 형사 구제와 보상 제도 난이도 중

정답 ④

#### 정답해설

④ 제시문은 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 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오답해설

- 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② 형사보상제도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③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10. (가) ~ (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②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③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가) ~ (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법과 정치 - 기본권 난이도 중

정답 ③

정답해설

(가)는 자유권, (나)는 참정권, (다)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③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해설

- ①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로 국가의 적극적이 개입이 없어도 실현되는 권리이다.  
②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1.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문화를 A라고 한다면, 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B라고 한다.

<보기>

- ㄱ. A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B의 총합이다.
- ㄴ. B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 ㄷ. 사회 변화에 따라 B는 A가 되기도 한다.
- ㄹ. B는 A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사회문화 – 전체문화와 하위문화 난이도 중

정답 ④

정답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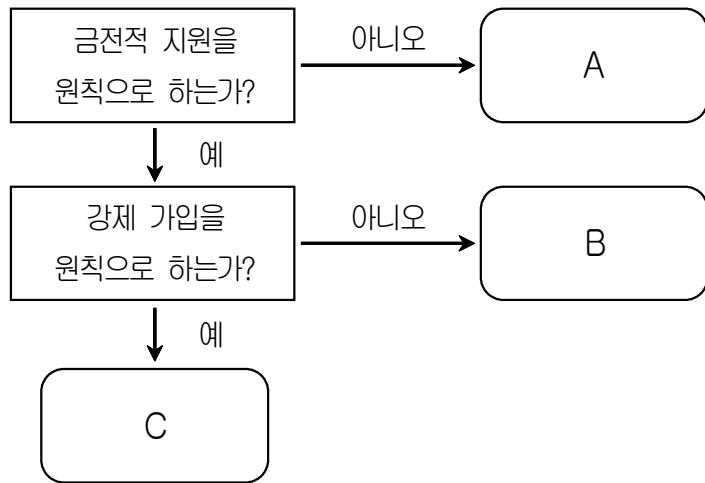
A는 전체문화 B는 하위문화이다.

- ㄷ. 사회변화에 따라 하위문화는 전체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 ㄹ. 하위문화는 전체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오답해설

- ㄱ.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의 합은 전체문화가 아니다.
- ㄴ. 하위문화는 전체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한다.

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 ①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 ②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 ③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 ④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사회문화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난이도 중

정답 ④

정답해설

A는 사회서비스를, B는 공공부조를, C는 사회보험을 나타낸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오답해설

- ① 사회서비스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 ② 선별적 복지인 공공부조는 보편적 복지인 사회보험보다 수혜대상의 범위가 좁다.
- ③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 ~ 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생산 방식	(가)	소품종 소량 생산	(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	+++	++
사회의 다원화 정도	++	+	+++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	++	+++	+

※ +가 많을수록 정도가 크다.

- ①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 > A > B 순으로 나타난다.
- ④ (가)는 단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사회문화 -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나이도 중

정답 ①

정답해설

A는 산업사회, B는 농업사회, C는 정보사회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정도는 농업사회 > 정보사회 > 산업사회이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이다.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는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이다.

- ①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이,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생산의 중심이 된다.

오답해설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사회가 크고, 정보사회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다.

③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순이다.

④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정보사회는 단품종 소량 생산이다.

14.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나 이론을 발견하려는 입장이라면, (나)는 사회·문화 현상에서 행위자의 의미와 동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과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 간의 상관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가)의 입장을 취한다. 한편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과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주제는 (나)로 접근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 ②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 ③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 ④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난이도 중

정답 ③

정답해설

(가)는 양적 연구를 (나)는 질적연구를 설명하고 있다.

③ 양적연구는 질적연구보다 인과관계 설명에 유리하다.

오답해설

- ① 일기와 편지 등의 비공식적 자료는 주로 질적연구에서 사용된다.
- ② 방법론적 일원론은 양적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은 질적연구를 전제로 한다.
- ④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연구에서, 직관적 통찰은 질적연구에서 사용된다.

15. (가) ~ (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일탈자가 되기도 한다.

(나) 사회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 사회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수단을 사용한다.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괴리되는 경우에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

(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재소자들의 도덕적 저항감이 이완되기도 한다. 또한 재소자들은 수감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우고, 출소 이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 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 ②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 ③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④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사회문화 - 일탈이론 난이도 중

정답 ①

정답해설

(가)는 낙인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 (다)는 차별적 교제이론을 말하고 있다.

① 낙인이론은 낙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오답해설

② 낙인이론은 미시적관점,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거시적 관점 중 기능론에 해당한다.

③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아노미 아론이다.

④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차별적 교제이론이다.

16.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 ②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 $\infty$ )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 상승할 때 공급량은 1 %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경제 - 가격탄력성 난이도 중

정답 ②

정답해설

- ②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 $\infty$ )이면 수요곡선은 수평이 된다.

오답해설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으로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 $es > 1$ )이면 가격이 1 % 상승할 때 공급량은 1 %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17. 다음 표는 각 국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구분	X재	Y재
갑국	100개	80개
을국	90개	60개

-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 ③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frac{11}{15}$  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 ④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경제 - 비교우위 난이도 상

정답 ③

정답해설

제시된 표의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X재	Y재
갑국	4/5	5/4
을국	2/3	3/2

갑국은 Y재, 을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 ③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교역조건은  $Y재 \frac{2}{3}개 \leq X재 1개 \leq Y재 \frac{4}{5}개$  이므로 X재 1개당 Y재  $\frac{11}{15}$  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오답해설

- ①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따라서 을국이 X재에 비교우위를 지닌다.
- ②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를 가진다.
- ④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을국은 X재를, 갑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GDP와 명목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질GDP	100	110	100
명목GDP	100	110	110

- ①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 ②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③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④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경제 - 물가지수 난이도 상

정답 ②

정답해설

- ② 2017년의 실질GDP가 2016년의 실질GDP보다 크므로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오답해설

- ① 2016년과 2017의 GDP디플레이터는 모두 100이므로, 물가는 상승하지 않았다.
- ③ 2018년도의 GDP디플레이터는 110, 2016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므로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④ 2018년의 실질GDP가 2017년의 실질GDP보다 작으므로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19.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이고 고용률이 60 %인 국가의 실업률은?

- ① 10 %
- ② 15 %
- ③ 20 %
- ④ 25 %

경제 - 고용지표 나이도 종

정답 ④

정답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이고 고용률이 60 %이면,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경제활동 인구는 80, 취업자가 60, 실업자가 20이 된다. 따라서, 실업률은 25%이다.

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소득 구간	연도	2017년	2018년
2,000만 원 이하		5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5 %	20 %
5,000만 원 초과		35 %	30 %

※ 소득세 부과 방식: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 증가하였다.
-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경제 - 소득세 난이도 상

정답 ③

정답해설

③ 연간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200만원이 부과된다. 2017년 소득세액은 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0만 원,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400만 원)은 2017년의 소득세액(350만 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오답해설

- ① 2017년과 2018년 모두 소득 구간별 세율이 증가하므로 똑같이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200만 원)은 2017년의 소득세액(100만 원)에 비해 100 % 증가하였다.
-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 $200+600+300=1100$ 만 원)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200만원)의 3배를 넘는다.